

#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17

2024/2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민영훈

Email:yhmin@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 · 해양규범연구실(0517974730)

## Contents

### 국제기구

유엔총회(UNGA) .....	2
유엔총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위협 대처를 위한 결의안 제출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	5
나이지리아 정보 제출에 대한 CLCS 권고 공개	
아세안(ASEAN) .....	8
제24차 아세안-유럽연합 장관급 회의 개최	

### 지역별 동향

아메리카 .....	15
미국	미·영 연합군, 예멘 내 후티 반군 근거지 공격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 재개
가이아나	베네수엘라-가이아나,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장관급 회담 개최
아시아 .....	22
중국	IMEMO 세계 종합 해양잠재력 조사에서 중국 1위 차지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실무회의 중국 난징에서 개최
	대만-나우루 단교...태평양도서국 3개만 대만과 외교관계 유지
일본	일본, 새로운 해양상황인식체계(MDA) 구상 발표
필리핀	필리핀·베트남 남중국해 사고 예방을 위한 해안경비대 간 협력 확대 합의
태평양도서국 .....	35
미크로네시아	미크로네시아, 200해리 이원 대륙붕 권원에 관한 새로운 주장 유엔 제출
태평양도서국	태평양도서국의 지정학: 2024년 전망

###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	43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총회

## UNGA

전문연구원 이서희

## 유엔총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위협 대처를 위한 결의안 제출

2024년 1월 16일, 유엔총회 의장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위협 대처를 위한 결의안(A/78/L.35)’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사무국 대표는 유엔 사무국의 재정 지원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 이행될 수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 대표 역시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총회는 2024년 9월 25일에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엘살바도르 대표는 고위급 회의 결과 문서가 채택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집단과 이번 고위급 회의의 주제와 향후 고려사항을 협의해야 하며 업무 중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엔총회 의장은 고위급 회의 개최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예방하고, 보호 및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하였다.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위협”

통가 대표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협이 태평양 지역의 해안국가, 소도서 개발대상국, 민족, 공동체의 삶과 생계 및 복지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였다. 이 국가들 중에는 유엔 회원국도 포함되어 있다. 투발루 대표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이 소도서 개발도상국과 저지대 지역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고유한 유산을 보호 및 보전하기 위한 공동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투발루 대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과 기후자금 조달의 확장을 주장하였다. 엘살바도르 대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소도서 개발도상국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이 문제에 국제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실질적 위협” 표현의 문제

통가 대표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기후변화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실질적 위협”은 국제법에서 신중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가 대표는 기후변화 관련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위협”은 지나치게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적 문제와 관련



## 유엔총회

### UNGA

된 표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예컨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연안·해양지형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 및 법적 지위에 실질적 위협을 가한다는 표현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소도서국과 주권에 실질적 위협을 가한다는 표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와 의무 준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엘살바도르 대표 역시 국제사회에서 영토가 사라지거나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되는 현실과 천연자원에 관한 주권과 국가 및 주권에 관한 법적 규범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엘살바도르 대표는 기후 위기로 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가는 주권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가들이 검토 중인 해양구역의 기준선이나 외곽 한계 유지, 해도 또는 법적 좌표를 사무총장에 기탁한 후 업데이트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제법상 기후변화를 국가, 특히 소도서국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표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하였다.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위협”의 대응

투발루 대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 인간이 소도서국에 거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적 안정성 확보는 국민의 생계와 경제자원을 해양에 의존하는 국가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투발루 대표는 해수면 상승과 관련 없이 유엔 회원국의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하면서,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는 유엔 회원국의 주권과 국가 지위의 양도 불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총회 의장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영토의 회복 불가능한 손실부터 생계의 지속적인 불안정에 이르기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실질적 위협에 가장 취약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의 편에 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의 시사점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3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내 연안에 설치한 21개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3.03mm의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실제로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해수면이 10.3cm 높아졌

### 유엔총회

#### UNGA

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해수면 상승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있다.

그림 1. 2024년 1월 16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위험 대처를 위해 결정문 초안을 채택한 유엔총회 모습



그림 출처: YouTube UNPGA78 캡처본

출처 : [1] United Nations, 16 JANUARY 2024, General Assembly Decides to Convene High-Level Meeting 25 September to Address Existential Threats Posed by Sea-Level Rise, Adopting Draft by Consensus



## 대륙붕한계위원회

## CLCS

전문연구원 김주형

## 나이지리아 정보 제출에 대한 CLCS 권고 공개

기니만은 중앙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따라 위치한 대서양의 북서쪽에 있는 만으로, 나이지리아, 카메룬, 적도 기니, 가봉, 그리고 상투메 프린시페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기니만은 무역로이자 석유·가스과 같은 천연자원 매장지로 주변 국가들의 경제 및 지정학적인 역학 관계에서 중요한 해역이다. 나이지리아는 기니만의 서부 해역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에 따라 기선에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관한 정보를 2009년 5월 7일에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으며, 2016년 11월 18일에 수정 정보를 제출했다. CLCS에서는 2건의 정보를 모두 검토했으며, 2023년 8월 최종 권고가 완성되었다.

이번 CLCS 권고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수정 제출한 정보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이지리아의 대륙붕 외측 한계가 200해리 이원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 2009년 5월 7일 나이지리아의 정보제출에 포함된 6개 F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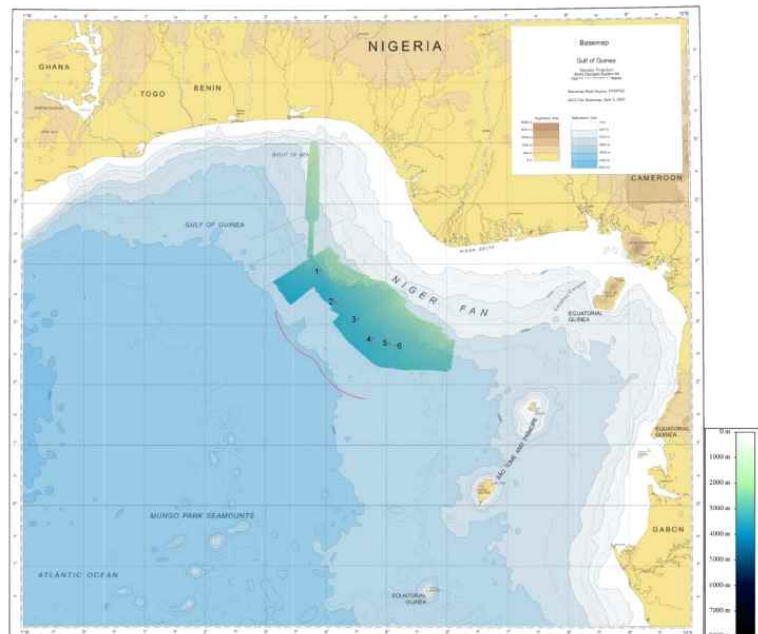


그림 출처: CLCS 홈페이지,  
Summary of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Regard to the  
Submission Made by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on  
7 May 2009, Figure 6.





##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2009년 나이지리아가 제출한 정보는 그림 3과 같이 6개의 대륙사면의 끝(Foot of Slope, 이하 FOS)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CLCS 하부위원회에서는 퇴적층의 두께를 측정하는 결정적인 지점인 FOS-NGA-1부터 FOS-NGA-3까지 3개의 FOS를 검토하고 이 중 FOS-NGA-1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2개 FOS에 대해서는 나이지리아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나이지리아는 수심과 후방산란자료 등을 계측하는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데이터와 탄성파 조사로 얻은 지구물리학적 데이터를 반영해 대륙사면의 시작(Base of Continental Slope, 이하 BOS)과 FOS를 재분석한 수정 정보를 2016년에 제출했다. 아래 그림 3은 수정 정보에 수록된 FOS의 위치이다.

그림 3. 2016년 11월 18일 수정 정보에 제시된 4개의 FOS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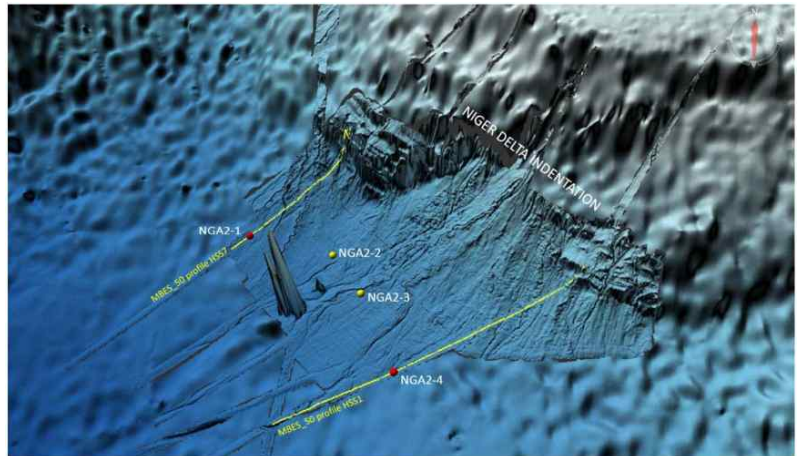


그림 출처: CLCS 홈페이지,  
Summary of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Regard to the  
Submission Made by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on  
7 May 2009, Figure 8.

CLCS 하부위원회는 수정 정보의 FOS NGA2-2를 BOS라고 확인하고, 제출 정보에 포함된 과학기술 문서와 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나이지리아가 제출한 FOS 목록이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및 CLCS 과학기술지침 제5장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고정점을 결정하고 이를 연결하는 직선의 구성 등 나이지리아가 제출한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론에 동의했다.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4항

- (a) 이 협약의 목적상 연안국은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아래 선 중 어느 하나로 대륙변계의 바깥끝을 정한다.
- i. 퇴적암의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인 가장 바깥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 ii.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않는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대륙붕 외측 한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4항에 따라 퇴적물 두께에 대한 공식에 부합하는 6개 지점(그림 3의 OL1~OL6)을 연결하는 길이가 6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직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CLCS는 기니만 서쪽 나이지리아 대륙붕 외측 한계의 최종 설정은 국가 간 경계획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했다.

그림 4. 2023년 CLCS 권고에 따른 나이지리아 대륙붕의 외측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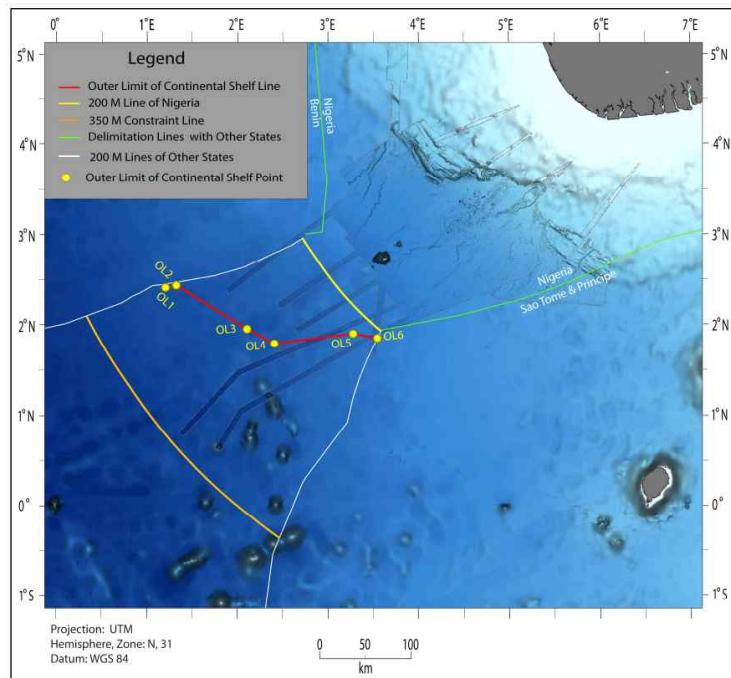


그림 출처: CLCS 홈페이지,  
Summary of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Regard to the  
Submission Made by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on  
7 May 2009, Figure 26.

이번 나이지리아의 대륙붕 외측 한계 확장은 주변 국가와의 관할권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CLCS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해역의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여 지질에 대한 정확한 구조와 퇴적 과정을 재평가한 수정 정보를 제출하여 CLCS가 나이지리아의 FOS 설정 기준 전체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양영토 경계조사를 위한 탐사 기술, 잠재 매장 자원 확인을 위한 지질 조사 등 해양조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출처 : [1] CLCS 홈페이지, Summary of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Regard to the Submission Made by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on 7 May 2009 [2] Financial Nigeria, Joy Dimka, Potential benefits of the extension of Nigeria's maritime borders, 2024년 1월 23일



## 아세안

## ASEAN

전문연구원 이서희

## 제24차 아세안-유럽연합 장관급 회의 개최

2024년 2월 2일, 제24차 아세안-유럽연합 장관급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아세안과 유럽연합 대표는 지난 47년 간 상호 간 관계의 근거가 되는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재확인하였다. 이 회의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정세

이 회의에서는 국제정세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기존 세계경제의 취약성(성장의 제약, 인플레이션 증가, 공급망 붕괴,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 심화, 금융 안정성 리스크의 상승 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주권, 정치적 독립성, 영토보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면서 북한에 핵실험 자제와 유엔 안보리결의 준수를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대화의 재개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유엔해양법협약,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의 준수

이 회의에서는 아세안과 유럽연합 간 대화-동반자 관계 수립 45주년을 기념하면서 아세안의 중심성 및 주도 방식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국제 현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제법의 준수, 평화와 안정 유지, 상호이익, 공동 관심사에 관한 호혜적 협력 및 평등 원칙에 기반하여 아세안-유럽연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즉, 이 관계는 국제법을 존중 및 준수했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법 준수를 기반으로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공약과 국제법, 다자주의, 국제규범을 통한 다자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82년





## 아세안 ASEAN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 국가 주권 및 영토 보전, 해양 안보 및 안전,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해양 영역에서 안정 강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유엔총회결의안 제76/72호 전문에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성격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여, 이 협약이 해양과 바다에서 모든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법적 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해양 부문에서 국가, 지역 및 글로벌 행동과 협력의 기반으로서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과 이 협약이 남중국해에 주는 평화, 안보, 안전 및 항행의 자유에 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가 간 신뢰와 믿음을 증진하려면 남중국해에서 긴장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효과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모든 국가는 남중국해의 평화, 안보,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회의에서는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정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이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이 협약에 대한 서명, 비준, 승인, 가입을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국제인도법의 준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간 협력 강화에 관해 논의하였다. 2023년 10월에 개최된 제5차 “유럽연합-아세안 인권에 관한 정책 대화”<sup>1)</sup>에서 소정의 성과를 냈으며, 향후 2년간 상호 관심 분야에 관한 추가적인 활동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에 관해 논의하였다.

먼저, 중동의 정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민간인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휴전을 위한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인질 중에서도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환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인권 침해 상황에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지역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한편, 유엔헌장에 따른 대화와 이해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평화와 화합

1) 영문은 “EU-ASEAN Policy Dialogue on Human Rights”이다.



## 아세안

## ASEAN

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관용과 중용의 가치에 따른 문화적·종교적·언어적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기후변화 관련 논의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sup>2)</sup>,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자원 조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기술 이전등의 측면에서 협력과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상호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환경보호라는 전 지구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는 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연합-아세안의 장관급 및 고위급 대화”, “아세안의 지속가능개발 및 대화 센터”<sup>3)</sup>가 주최하고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는 아세안 순환경제 플랫폼과 유럽-아세안 대화방식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탄소 중립을 위한 아세안 전략을 지지하면서, 탄소의 가격책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sup>4)</sup>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5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라는 상호 연계된 위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에 자연유산과 자연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은 “월경성 연무 오염에 관한 아세안 협정”<sup>5)</sup> 이행을 위해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조정 센터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아세안은 유럽연합에 아세안 기후변화센터 설립 지원과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역내 전략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지식을 요청하였다. 추가적으로, 아세안은 생물다양성 손실에 관한 전 세계적인 우려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이 최근 종료된 아세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지역 관리<sup>6)</sup> 프로젝트를 통해 아세안 생물다양성 센터를 지원

2) 2015년 9월에 채택된 유엔 SDGs 서문에서는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라고 하면서,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의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다.

3) 영문은 “ASEAN Cent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udies and Dialogue(ACSDSD)”이다.

4)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에 개최되었다. COP28에서는 28년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적시된 첫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5) 2002년 월경성 연무 오염에 관한 아세안 협정(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ATHP)은 아세안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협정 중 하나이다.

6) 영문은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in ASEAN(BCAMP)”이다.



## 아세안

## ASEAN

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하였다.

### 아세안과 유럽연합 간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및 세계무역기구 개혁 필요성의 강화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무역과 투자 기회 증진을 통한 양 지역 간 연계 강화, 무역 및 디지털 경제, 녹색기술 및 서비스, 지속가능한 상품의 생산 및 소비, 공급망의 복원력과 같은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공동목표로서 향후 아세안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G20<sup>7)</sup> 원칙을 고려하여 양질의 투자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연계성 구축, 양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기후와 기술 분야의 협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수소의 규모 확대, 에너지 체제의 상호연결성 강화, 재생에너지 흡수와 체제 통합의 실질적인 확장,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의 통합,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접근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세계무역기구 개혁의 필요성을 지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26일-29일,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무역기구 규범과 기본원칙의 준수, 이에 따른 비차별적, 개방적, 공정·공평·투명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 안보 협력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사이버안보와 식량안보에 관해 논의하였다. 먼저, 2019년에 채택된 “사이버안보 협력에 관한 EU-아세안 성명”을 제시하면서, 정보통신기술 도모를 위한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아세안-싱가포르 사이버안보 우수센터”,<sup>8)</sup> “아세안-일본 사이버안보 역량강화센터”<sup>9)</sup>와 유럽연합 간 협력,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sup>10)</sup>에 대한 협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유럽연합은 아세안 지역안보포

7) G20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러시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연합으로 이루어진 19개 주요국과 2개 국가연합의 모임을 의미한다.

8) 영문은 “ASEAN-Singapore Cybersecurity Centre of Excellence(ASCCE)”이다.

9) 영문은 “ASEAN-Japan Cybersecurity Capacity Building Centre(AJCCBC)”이다.

10) 영문은 “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DEFA)”



## 아세안 ASEAN

럼<sup>11)</sup>을 통한 주요 인프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시장의 식량가격이 안정적인지, 모든 국가에 비료를 비롯한 필수 농산품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무엇보다도,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의 수출이 지속되려면 흑해의 안보와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재난관리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들은 아세안 재난관리·인도적 지원센터<sup>12)</sup>와 유럽연합 긴급대응조정센터 간 재난 관리 및 긴급대응 분야의 협력, 상호 확인된 분야의 훈련 및 지식 교환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식 공유, 기술 지원, 역량 강화 활동, 자원 동원 및 기타 적절한 방법을 포함하여 역내 기후 및 재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아세안은 재난관리 및 긴급대응에 관한 협정<sup>13)</sup>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은 2024-2027년의 기간 동안 진행될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와 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에 관한 전문가 실무그룹의 옹저버 프로그램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유럽연합이 이 활동과 프로그램에 옹저버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공동체 구축과 지역 통합 및 협력

이 회의에서 아세안은 유럽연합이 공동체 구축과 지역통합 노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해양협력,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상호 간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분야를 확인하면서, 유럽연합과의 파트너십 강화, 아세안 회원국과 전 세계 간 개발 격차 해소,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등 아세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2022년 12월 14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연합-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정상의 성명 이행 상황을 검토하면서 유럽연합-아세안 행동계획(2023-2027)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은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략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sup>14)</sup>과 인도-태평양 협력 관련 기본원칙을 공유하기로

11)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역내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다.

12) 아세안 재난관리·인도적 지원센터(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는 “AHA 센터”라고도 한다.

13) 아세안 재난관리 및 긴급대응에 관한 협정(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AADMER)은 지역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이 협정은 2005년에 서명되고, 2009년 12월 24일 비준되었다.





## 아세안

## ASEAN

하였다. 이들은 동남아시아의 우호협력조약, 아세안 헌장, AOIP원칙<sup>15)</sup>에 따른 AOIP의 4개 핵심 분야(해양 협력, 연계성,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2030 및 경제협력)와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 7대 우선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림 5. 제24차 유럽연합-아세안 장관급 회의 참가자 단체사진



그림 출처: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울러 이 회의에서는 아세안과 유럽연합의 최근 상황을 공유하였다. 아세안은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올해는 라오스를 의장국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아세안 대화관계”<sup>16)</sup>를 위한 조정자로서 필리핀 활동에 감사를 표하였고, 차기(2024-2027) 조정자인 브루나이가 유럽연합-아세안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우리나라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교역, 안보, 교육, 과학, 기술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양자관계는 2010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서로에게 필수적인 경제협력 파트너가 된 이후, 아세안은 최근 우리나라

14)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이라고도 한다. AOIP는 2019년 6월,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AOIP는 미국, 일본, 인도 등 역내 주요국들의 인-태 구상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이자,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15) AOIP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의 중심성,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유엔헌장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의 존중, 아세안 헌장, 상호 호혜관계를 위한 EAS원칙에 기반한다. 둘째,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이 지난 40년 이상 역내 평화와 번영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TAC에 따른 목적과 원칙에 따라 미래로 나아간다. 셋째, 지역 내 전략적이고 원원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모멘텀 창출에 기여한다.

16) 영문은 “EU-ASEAN Dialogue Relations”이다.



### 아세안

### ASEAN

라 외교의 새로운 지평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및 아세안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 February 2024, 24th EU-ASEAN Ministerial Meeting (Brussels, 2 February 2024) Joint Ministerial Statement [2] 내일신문, 2024년 1월 29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부흥기회로 삼으려는 아세안

## 아메리카

## 미국

## 미·영 연합군, 예멘 내 후티 반군 근거지 공격

그림 6. 미·영 연합군의 후티 반군 근거지 공습 지점 (붉은 점 부분)



그림 출처: CNN

친(親)이란계 반군 세력인 후티 반군과 미·영 연합군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홍해를 항행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해 온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미·영 연합군이 폭격한 데 이어 후티 반군이 즉각 보복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후티 반군을 지원해 온 이란 정부 또한 미국과 영국을 규탄하고 나서 역내 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홍해를 항행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지난해 이스라엘 대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시작되었다. 11월 후티 반군은 하마스 지지를 선언하며 이스라엘과 연관된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밝히고,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25차례 이상 공격하거나 납치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해운사들은 12월 15일 홍해에서 항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선박들이 홍해를 우회하면서 물류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에 미국은 12월 18일 후티 반군을 종식시키고 국제무역에 대한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이셸, 스페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함대를 창설하여 다국적군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였다.



## 아메리카

## 미국

후티 반군에 상인과 상선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S/Res/2722)이 채택된 이틀 후인 1월 11일과 12일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전투기, 선박, 잠수함을 동원하고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이용하여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예멘 일대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였다. 예멘 서부 해안부터 시작된 공습은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 사나를 비롯하여 예멘 곳곳에서 이루어졌으며, 100기 이상의 정밀 유도 미사일로 예멘의 후티 반군의 근거지 60곳을 공습하였다.

후티 반군 근거지에 대해 공습을 시행한 미국과 영국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홍해를 지나는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상선들을 겨냥한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하여 예멘 내 후티 반군 근거지의 목표물 8곳을 공격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밀 공격은 후티 반군이 국제무역과 무고한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공동성명에는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도 참여하였다.

후티 반군도 피습 사실을 공개하고, 보복을 경고하였다. 야흐야 사리(Yahya Saree) 후티 반군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이 총 18차례 공격하였고, 이 가운데 수도 사나와 주변 지역이 12차례 공격당했다”라고 밝혔으며, 후티 반군의 최고 지도자 압둘 말리크 후티(Abdul Malek Al-Houthi)는 “미국의 침략에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지원한 이란 정부 또한 이번 공습으로 예멘의 주권이 침해되었다며 미국과 영국의 공습을 강력 규탄한다는 뜻을 밝혔다.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인한 전 세계 해상 운송에 차질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및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의 불씨가 번져 중동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동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변수 속에서 후티 반군과 이를 지원 하는 이란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미국과 영국이 해묵은 분쟁의 궤적 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1] EJIL Talk, 2024년 1월 26일, “Protecting commercial shipping with strikes into Yemen : Do attacks against merchant shipping trigger the right of self-defense” [2] CSIS, 2024년 1월 12일, “Why did the United States Just Bomb Yemen?” [3] CNN, 2024년 1월 12일, “US and UK carry out strikes against Iran-backed Houthis in Yemen” [4] CNN, 2024년 2월 4일, “Who are the Houthis and why are they attacking ships in the Red Sea?” [5] UN Security Council, 2024년 1월 10일, Resolution 2722 (2024)



## 아메리카

## 미국

##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 재개

그림 7.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 당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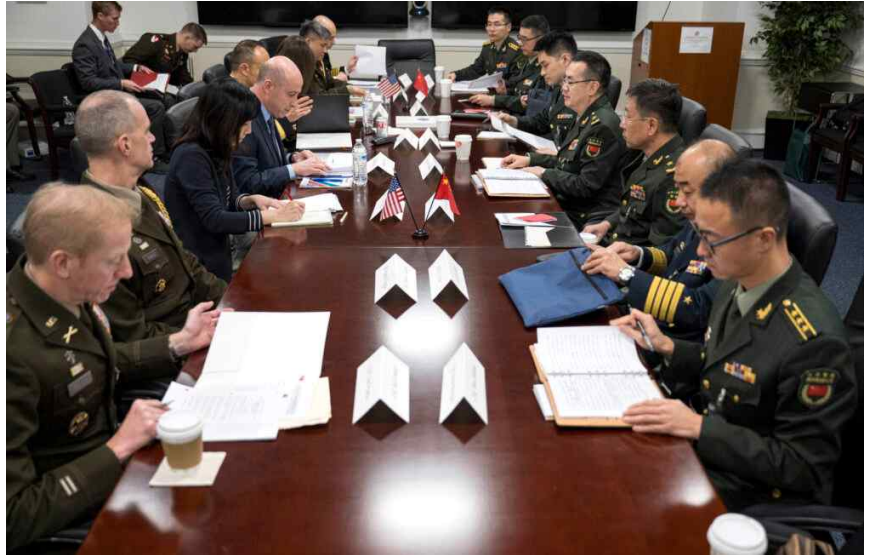


사진 출처: AP News

미국과 중국 간 군사 관계에 대한 회담이 재개되었다. 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제17차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U.S.-PRC Defense Policy Coordination Talk)이 미국 펜타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마이클 체이스(Michael Chase) 중국·대만·몽골 지역 미 국방차관(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China, Taiwan, and Mongolia)과 송양차오(Song Yanchao, 宋燈潮) 국제군사협력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Deputy Director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fice for International Military Cooperation)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이들간의 회담 동안 양국은 국방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 안전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양국 간 군사 소통 라인 개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2023년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22년 미국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관계는 급속도로

### 아메리카

#### 미국

냉각되었으며, 미국과 중국 항공기 및 선박 간 요격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극단에 치달았다. 그러던 중 2023년 11월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소통하여 갈등 상황을 해소하였고, 상호 충돌 방지 및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며, 군사 회담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미·중 간 관계 변화는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산업 등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중 관계의 회오리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 대응 전략을 기반으로 양국과의 관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1] U.S. Department of Defense, 2024년 1월 10일, "Readout of 2024 U.S.-PRC Defense Policy Coordination Talks" [2] Bloomberg, 2024년 1월 10일, "U.S., China Resume In-Person Defense Policy Coordination Talks" [3] AP News, 2024년 1월 10일, "US and Chinese military officers resume talks as agreed by Biden and Xi"

연구원 김민

## 아메리카

### 가이아나

#### 베네수엘라-가이아나,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장관급 회담 개최

그림 8. 베네수엘라-가이아나 회담 개최 모습



그림 출처: AFP

1월 25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가 에세퀴보(Essequibo) 지역을 둘러싸고 점증하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외교장관과 이를 중재하는 브라질 외교장관이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평화롭고 위협 없는 환경에서 에세퀴보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양국의 영토 분쟁이 한 번의 회담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세퀴보를 차지하기 위한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갈등은 1845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에세퀴보는 가이아나 영토의 3/4에 해당하는 16만 km<sup>2</sup> (서울 면적의 246배)를 차지하며 이는 영국, 쿠바, 그리스보다 더 넓은 면적이다. 베네수엘라는 19세기 스페인 식민 통치 당시부터 에세퀴보 지역이 자국 영토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주장해 왔고, 가이아나는 1899년 파리 중재판정을 근거로 에세퀴보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해 왔다.



## 아메리카

### 가이아나

그림 9.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분쟁 지역 (붉은 색 부분)



그림 출처: BBC

더욱이 2015년 에세퀴보에서 방대한 양의 석유·천연가스 매장 사실이 확인되어 베네수엘라의 영유권 주장이 더욱 거세어지자, 가이아나는 2018년 3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1899년 당시 중재판정의 법적 유효성(legal validity)과 구속적 효과(binding effect)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ICJ는 2023년 12월 1일, 베네수엘라에 분쟁지역에서의 현 상황을 변경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12월 3일, 에세퀴보를 자국에 편입시키겠다는 국민투표를 강행하였고 찬성표 비율은 95.9%에 달하였다. 더불어 국경에 군 병력을 확대 배치하고 국영석유회사에 자원 탐사·개발권을 허가하면서 가이아나 기업에 3개월 이내에 에세퀴보를 떠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각국 언론은 가이아나를 지지하기 위하여 영국이 군함을 파견한 사실과 미국 고위 간부들이 가이아나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을 근거로, 양국 갈등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회담을 발판으로 양국 간 오랜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전쟁과 더불어 또 하나의 전운이 남미에서도 피어오를 것인지 양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 아메리카 가이아나

출처 : [1] Reuters, 2024년 1월 26일, "Diplomats back non-violence as Venezuela, Guyana talk over border dispute" [2] France 24, 2024년 1월 26일, "Venezuela y Guyana plantean mantener un diálogo sobre el Esequibo sin "amenazas" [3] ICJ, 2024년 12월 1일,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4] BBC, 2023년 11월 24일, "Qué riquezas hay en el Esequibo, el territorio que se disputan Guyana y Venezuela desde hace casi dos siglos"



## 아시아

##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 IMEMO 세계 종합 해양잠재력 조사에서 중국 1위 차지

러시아 싱크탱크인 국립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Primakov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이하 IMEMO)가 발표하는 세계 종합 해양잠재력 순위에서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IMEMO에 따르면 세계 전체 해양 잠재력 가운데 중국이 15.9%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근소한 차이인 15.5%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의 해양 잠재력은 전 세계의 6.8%를 차지해 3위를 기록했다.

IMEMO는 2021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100개의 해양국을 대상으로 해양 잠재력을 조사하고 '해양잠재력지수(Index of Maritime Might, IMM)'를 발표한다. 각국의 해양력을 해양자원, 해양기구, 해양활동으로 나누고 계량화해 지수를 도출하고, 해양 잠재력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다. 첫 조사가 이뤄진 2021년에는 미국이 세계 해양 잠재력 1위를 차지했으나, 2022년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계속해서 1위에 올랐다.

미국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수에서 중국을 앞섰지만, 경량 군함과 상선(商船) 수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 세계 최대 해양자원 부문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를 담당하는 IMEMO 연구원들은 21세기 들어 미사일과 항공 기술이 급속히 발전했지만, 종합국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해군이 가진 위상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9~20세기의 경우 해군이 각국의 종합국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표 1. IMEMO 세계 종합 해양잠재력 상위 10개국(2024년1월)

순위	국가	비고
1	중국	2022년부터 연속 1위
2	미국	2021년 1위
3	러시아	2021년 이후 순위 동일
4	일본	상동
5	한국	상동
6	영국	상동
7	인도네시아	상동
8	노르웨이	상동
9	인도	2023년 10위에서 한 단계 상승
10	프랑스	2023년 9위

표 출처 IMEMO 자료 참고해 저자 작성

### 아시아

#### 중국

#### 미국·러시아·일본·한국 2~5위 차지

중국, 미국, 러시아 이외의 상위 10개 국가는 일본, 한국, 영국,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인도, 프랑스 순이었다. 러시아 해양산업 전문 매체인 Korabel.ru은 상위 10개 해양국은 대부분 활발한 해양활동을 전개하고 통제 가능한 넓은 영해를 보유하고 있어 해양 잠재력이 높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민간 조선산업 부문이 세계 선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매체는 세계 해양 잠재력 3위를 차지한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쇄빙선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북극해 작전 수행 경험이 풍부해 북극항로 운항 증가와 개발 확대 추세 속에서 해양 경쟁력을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해에서 우위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편, 이번 조사를 진행한 IMEOMO 연구원들은 일본의 경우 2021년부터 줄곧 4위를 차지했지만, 해양 잠재력 측면에서 발전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고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출처 : [1] 参考消息网, 2014년 1월 8일, “俄智库公布海上强国综合潜力排名 : 中国第一,” [2] Korabel.ru, 2024년 1월 8일, “Россия занимает третье место в мировом рейтинге морских держав”



## 아시아

##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실무회의 중국 난징에서 개최

1월 16~18일 중국 난징에서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개최국인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호주, 캐나다, 칠레 등 30개국의 대표단 70명이 참가했다.

WPNS는 1987년 미국 해군참모총장의 제안으로 결성된 다자간 해군 협의체다. 서태평양 지역 해군 리더들이 만나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본 회의는 2년에 한 번씩, 실무회의는 1년에 한 번씩 열린다. 올해 열리는 제19회 심포지엄은 중국 칭다오에서 4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종전 WPNS 회의는 2022년 1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다.

그림 10. 중국 난징에서 열린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실무회의(2024.1.16.)



그림 출처: China Military

한미일 등 30개국 참가…본 회의는 올 4월 칭다오에서 개최 예정

WPNS는 당초 서태평양 지역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부르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12개국의



### 아시아

#### 중국

로 출범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현재 참가국은 23개로 증가했으며, 옵서버 국가도 7개에 이른다.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것과 동시에 WPNS는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해양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전문 협의체로 그동안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되기도 했다. 가령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회원국들은 해상사고와 소통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규범인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한 규범)'에 합의했다. 하지만 서태평양 지역 각국은 각 해역에서 여전히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최근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출처 : [1] China Military, 2024년 1월 17일, "China hosts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Workshop" [2] ROYAL AUSTRALIAN NAVY, "Semaphore: The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Semaphore Issue 14, 2006. [3] 中国新闻网, 2024년 1월 16일, "西太平洋海军论坛2024年工作小组会在南京开幕" [4] 新华网, 2024년 1월 18일, "西太平洋海军论坛工作小组会达成多项共识"

## 아시아

##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 대만-나우루 단교...태평양도서국 3개만 대만과 외교관계 유지

태평양도서국 나우루가 1월 15일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며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나우루 리오넬 아인기미(Lionel Aingimea) 외교통상부 장관은 곧이어 중국을 방문해 24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수교를 선포했다.

나우루는 1980년 대만과 국교를 맺었으나 2002년 이를 끊고 이듬해 중국과 수교했다. 그러나 2005년에 다시 중국을 외면하고 대만과 수교해 지금까지 외교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이후 대만은 호주와 함께 나우루의 2대 원조국(지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대만과 나우루가 단교하게 되면서 대만의 수교국은 12개로 줄어들었다. 태평양도서국 중에서는 팔라우, 마셜제도, 투발루 3개국만 남은 상황이다. 이 중 투발루도 단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의 외교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26일 투발루 총선에서 그동안 친대만 성향으로 꼽히던 현 카우세아 나타노(Kausea Natano) 총리가 낙선해 대만과의 외교관계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투발루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외교관계를 조정하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나우루와 중국의 외교관계 수립식에 참여한 양국 외교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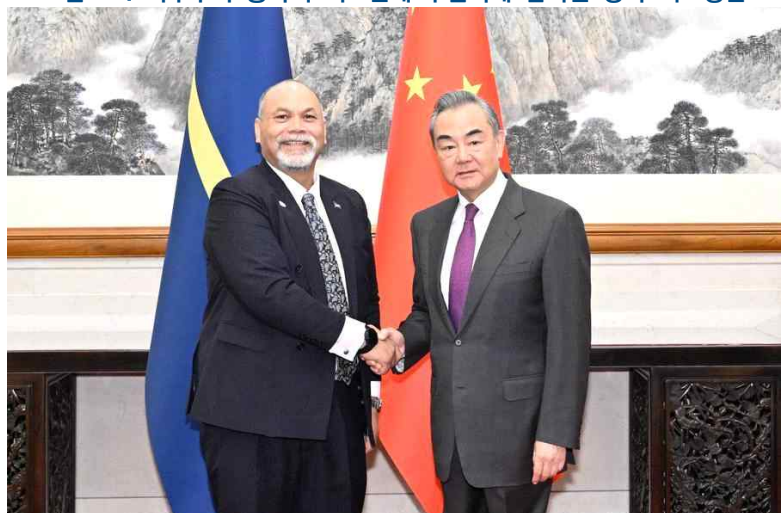


그림 출처: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아시아

### 중국

한편, 나우루 정부의 이번 선언은 1월 13일 치러진 대만의 총통 선거 직후 나온 발표로, 전문가들은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賴清德)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한 중국의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국가는 ‘중국의 일부인’ 대만과 외교관계를 동시에 수립할 수 없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민진당은 이번 선거 승리로 사상 처음으로 8년 집권에 이은 계속 집권에 성공해 올해 5월부터 최소 2028년 5월까지 여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유사입장국과 비공식적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역시 대만의 국제적 입지를 더욱 축소하기 위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민진당 출신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2016년 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은 국가는 나우루를 포함해 총 10개국에 달한다. 2016년 상투메프린시페, 2017년 파나마, 2018년 도미니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2019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2021년 니카라과, 2023년 온두라스, 2024년 나우루가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다.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추구했던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정부 시기(2008~2016년)에는 대만과 단교한 국가가 감비아 1개에 불과했다.

그림 12. 태평양도서국 나우루의 위치



그림 출처: Google Map

출처 : [1]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년 1월 25일, "China, Nauru resume diplomatic relations" [2] The Washington Post, 2024년 2월 1일, "China sets sights on Taiwan's three remaining tiny Pacific allies" [3] 今周刊, 2024년 1월 15일, "台灣與諾魯斷交，只剩12個邦交國》如果台灣一個邦交國都沒有，會發生什麼事？"



## 아시아

##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 일본, 새로운 해양상황인식체계(MDA) 구상 발표

해양 국가를 표방하는 일본은 해난사고, 해양 기인 자연재해, 해양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에 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해양상황인식(MDA)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MDA는 해양에서의 안전보장,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산업 진흥 및 과학·기술 발전 등에 도움이 되는 해양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집약·공유함으로써, 해양의 상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해양정보체계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2013년 해양기본계획,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 2015년 우주기본계획 등 일련의 전략 및 계획을 토대로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집약·공유하고 해양과 관련된 상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추진했다. 이러한 대응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5년 ‘일본에서의 MDA에 대해서’, 2016년 ‘일본의 MDA의 능력 강화를 위한 대처’, 2018년 ‘일본에서의 MDA 능력 강화를 위한 향후 대처 방침’ 등을 마련해 MDA 관련 체제를 정비해 왔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2023년 ‘제4기 해양기본계획’, 2023년 ‘우주기본계획’과 ‘우주안전보장구상’이 결정되었다. 특히 제4기 해양기본계획에서는 MDA 역량 강화를 중점 시책의 하나로 규정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본의 MDA 구상’을 2023년 12월 22일 종합해양정책본부 결정으로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MDA를 폐지하고 새로운 ‘MDA 구상’을 책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보수집체제, 정보의 집약·공유체제, 국제연계·국제협력, 정보의 이용 등 4개 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해 종합적인 MDA 능력을 높이고 해양에서의 ‘가시화’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지난 문서인 ‘일본에서의 MDA 능력 강화를 위한 향후 대처 방침’(2018년)에서 능력 강화의 방향성 및 시책으로 정보수집체제, 정보 집약·공유체제, 국제연계·국제협력 등 3개의 접근법을 제시했다면, 2023년에는 ‘정보의 이용’을 별도의 시책으로 분리해 MDA 능력 향상을 위한 향후 대응을 위한 4개의 접근법으로 정리한 것이 차이점이다. 향후, 이 구상에 근거해,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MDA 능력 강화를 추진해, ‘제4기 해양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종합적인 해양의 안전 보장’과 ‘지속가능한 해양의 구축’이라는 2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실현하도록 MDA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아시아

## 일본

MDA의 대상 해역은 ① 일본의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 ② 해상교통로 등 해양에서의 안전보장 상 중요한 해역 등, ③ 자연재해 대책, 해양환경보전, 해양산업진흥 등에 필요한 해역이다.

새로운 MDA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정보수집체계-해양을 보는 ‘눈’의 강화

영해 등에서의 정보수집체계 강화를 위해 ① 함정, 순시선정, 항공기 등의 충분한 정비, ② 위성을 이용한 정보수집체계 강화, ③ 연안지역 설치 레이더를 이용한 정보수집체계 강화를 방법으로 제시한다. 현재 일본의 영해 등 전반에 대한 경계 감시 활동 기반 정보 수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우선 함정, 순시선정, 항공기 등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무인항공기는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위성이나 연안부 설치 레이더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목표도 식별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일본 영해 등의 정보 수집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필요 장비의 양적 증대를 검토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에서는 운용과 관련해 지원·협력하고 무인항공기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의 공유 등에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일본 영해 등을 제외한 중요한 해상교통로 등에서의 정보 수집은, 일본이 보유한 각종 장비나 연안부 설치 레이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위성 기반 정보 수집과 함께 해상교통로 연안국 등의 MDA 능력 강화에 맞추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로 연결시키도록 했다.

해양환경보전, 해양산업진흥 및 과학·기술 발전 등의 해양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보수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사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조사선·측량선·관측선이나 항공기, 위성, 해양로봇, 부표나 플로트 등의 각종 조사·관측 플랫폼의 유지·강화를 진행 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 변화가 해양 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북극지역 연구선을 이용해 북극해 항로의 이용·활용 등을 위한 정보 수집도 진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해양권익 확보에 관해서는 일본 해역의 종합적 관리에 필요한 것이나 경제회정협정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해저지형, 자원의 분포상향 등 관련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 「해상보안능력 강화에 관한 방침」에 기초한 해양권익 확보에 필요한 해양조사능력의 강화, 해양조사에 관한 전략적 대응을 추진한다.





## 아시아

## 일본

## (2) 정보의 집약·공유체제-정보를 연결하는 '신경'의 강화

해상보안청이 운용하는 '해양상황표시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방위성·자위대와 해상보안청 간 정보공유 내실화·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상황표시 시스템'의 정보 수집은 내각부 종합해양정책 추진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의 정보교환과 공유를 통해 추진한다.

또, 해양정보의 수집하는 부처 및 정부 관계기관은 필요한 데이터·정보를 가공·관리하고 제공한다. 또한 해양 인프라를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공단체나 민간기업 등과도 제휴·협력한다. 이와 더불어 과학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대학·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도 해양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과 학계와의 해양정보 공유체제 및 일반 국민 대상 정보공유체제 정비를 추진한다.

## (3) 국제연계·국제협력-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미국 관련 기관과의 협력, 미일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국가에의 지원 등을 통해 동맹국·동지국 등과의 협력 강화를 제시한다. 더불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MDA에 관한 일본의 대응 및 동맹국·동지국 등과의 제휴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동시에 MDA에 관해 다른 관계국과의 협의를 전략적으로 실시한다.

다자간 대응 강화에 대해서는 IPMDA, 아시아해적대책 지역협력협정·정보공유센터(ReCAAP-ISC)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동시에 동맹국·동지국 및 해상교통로 연안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공유한다.

해양 기인 자연재해의 파악이나 해양 환경 보전 등의 해양 정책의 추진에 관한 국제적인 제휴·정보 공유를 위해, 이미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해양 관측·조사나 해도 기반 정보의 정비, 표준화 등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국제 해양 관측 협력을 추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나 기상 위성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해양의 관측·조사·기반 정보의 정비에 관해 협력한다. 또한 전지구 관측시스템(GEO)이나 유네스코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의 국제해양데이터정보교환(IODE) 프로그램, 세계기상기구(WMO) 등의 국제 관측 정보 공유 체제를 통해 해양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이들 정보가 각각의 용도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정비에 공헌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 아시아 일본

해상교통로 연안국 중에는 MDA에 관해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무성, 방위성·자위대 및 해상보안청에서 역량 강화 지원, 장비품·기술 협력 등을 통한 MDA에 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그리고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의 MDA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 파견,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에서의 MDA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되는 해상교통로 연안국 등의 MDA 대응 상황 및 요구사항을 조사·평가해, 각국이 강화해야 할 분야를 명확히 한 후 지원하는 등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도록 했다.

### (4) 정보의 이용-AI 등 활용한 「솔루션」 강화

효율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산장치나 저장소, 네트워크 환경 등의 기반 정비나 해양예측기술이나 예측결과의 가시화 방법의 고도화 등도 강조하고 있다. 점점 대용량화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확보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성 데이터나 AI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시점에서 데이터 해석 방법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여 안전보장·법집행 관련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을 확립한다. GIS 정보 간의 상호 연계는 내각부가 중심이 되어 연계를 촉진하고 다양한 관민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해, 산업에의 이용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일본은 해상풍력 발전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해역 이용을 확대하고 있어, 해양조사의 추진, 관련 해양정보, 해양 공간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관할 해역에 있어서의 규제나 이용 실태를 '해양상황 표시 시스템'에 공유하고,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복합적인 해역 이용에의 적용을 검토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MDA에 관한 시책은 내각부 '종합해양정책 추진 사무국',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내각부 '우주개발전략 추진 사무국'의 3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MDA 시책은 이 3개 기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등도 관련되므로, 관계부처 등의 연락·조정 등 연계 역할은 내각부 '종합해양정책 추진 사무국'이 담당하고, 종합적인 해양안전보장 강화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이, 우주개발과 관련된 MDA 능력 강화는 내각부 '우주개발전략 추진 사무국'이 담당할 것을 명시했다.



## 아시아

## 일본

표 2. 새 MDA 구상 내용

접근법	주요 내용
정보수집체계 -해양을 보는 「눈」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해 등에서의 정보수집체제 강화</li> <li>- 영해 등을 제외한 중요한 해상교통로 등에서의 정보 수집 체제 강화</li> <li>- 해양환경보전, 해양산업진흥 및 과학·기술 발전 등의 해양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보수집 체제 강화</li> </ul>
정보의 집약·공유체제 -정보를 연결하는 「신경」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상황표시 시스템’의 기능 강화와 정보의 충실</li> <li>- 방위성·자위대와 해상보안청과의 정보 공유 충실 및 강화</li> <li>- 정보의 적절한 관리</li> <li>- 해양 디지털 트윈 구축</li> </ul>
국제연계·국제협력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국·동지국 등과의 연대 강화</li> <li>- 다자체제 강화</li> <li>- 지역 대상 지원 강화</li> </ul>
정보의 이용 -AI 등 활용한 「솔루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예측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방법 고도화 등</li> <li>- ‘해양상황표시 시스템’과 타분야 GIS와의 상호연대 강화</li> <li>- 영해 등에서 ‘해양상황표시 시스템’의 복합적인 해역 이용에의 적용 검토</li> </ul>

표 출처:  
「我が国の海洋状況把握(MDA) 構想」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MDA 체제 구축은 우리의 현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주변 해양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불법 어선, 해양 기인 범죄, 해양 분쟁에 따른 위협 등은 곧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로 연결되므로, 해양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한 MDA 체제 구축은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 우리 해경에서도 MDA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광범위한 해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양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출처 : [1] 内閣府, 我が国における海洋状況把握(MDA) [2] 総合海洋政策本部, 2023년 12월 22일, 我が国の海洋状況把握(MDA) 構想



## 아시아

## 필리핀

전문연구원 이서희

## 필리핀·베트남 남중국해 사고 예방을 위한 해안경비대 간 협력 확대 합의

필리핀과 베트남은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리핀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던 지난 2024년 1월 30일, 양국은 남중국해에 관한 양국 간 협력 강화의 내용을 포함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사고 예방”과 “해안경비대 협력”에 관한 두 개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의 세부적인 합의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전체적으로 양국의 해양경비대 간 핫라인 구축과 공동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해양경비대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양국은 무역과 투자 증진에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쌀에 관한 주요 협정에 서명하였다.

필리핀은 성명을 통해 양국 간 신뢰 증진과 해양문제 협력의 강화가 이 협정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필리핀 대통령은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자국의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하면서 해양협력이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필리핀은 중국 해안경비대의 공격적인 행동을 언급하면서, 자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고, 오랜 분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베트남 대통령은 기존의 해양협력 방식, 특히 차관급 해양문제 합동위원회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는 지역 정세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베트남 대통령은 양국의 해안경비대 사령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어부들의 안전과 보안 강화, 예상치 못한 해양사건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이 자국의 남중국해 이익을 침해하는 특정 부분에 관해 협력하는 경우 남중국해의 상황을 자극하고 분쟁의 위험을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싱가포르 연구원 하 호앙 홉(Ha Hoang Hop)은 이 합의가 중국의 회색 지대 전략에 대응하고 모든 평화적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필리핀과 베트남의 이익을 확인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필리핀과 베트

아시아  
필리핀

남 간의 합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중국의 반응이 이 문제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남중국해 안보는 우리나라의 국익과도 직결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역 중 수출입 물동량 40% 이상, 원유 90% 이상이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는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중국해 해양분쟁 예방을 위해 역내·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림 13.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왼쪽)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오른쪽)이 악수하는 모습



그림 출처: East Asia

출처 : [1] East Asia, 30 January 2024, Vietnam, Philippines Sign Deals on South China Sea Security [2] 연합뉴스, 2024년 1월 30일, 필리핀·베트남, '중과 분쟁' 남중국해 협력 확대 합의



## 태평양도서국

### 미크로네시아

전문연구원 민영훈

#### 미크로네시아, 200해리 이원 대륙붕 권원에 관한 새로운 주장 유엔 제출

지난 1월 17일 미크로네시아 연방(FSM)은 태평양 일부 해역의 대륙붕 권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유엔에 제출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통령 웨슬리 시미나(Wesley Simina)는 지난 12월 자국의 해역을 명시한 새로운 해도를 이미 승인했다. 이 해도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미크로네시아의 권원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일부는 팔라우와 일본이 권원을 주장하는 해역과 중첩하고 있어 향후 이웃 국가들간 해양 관할권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 미크로네시아 압섬 북부 지역 대륙붕 경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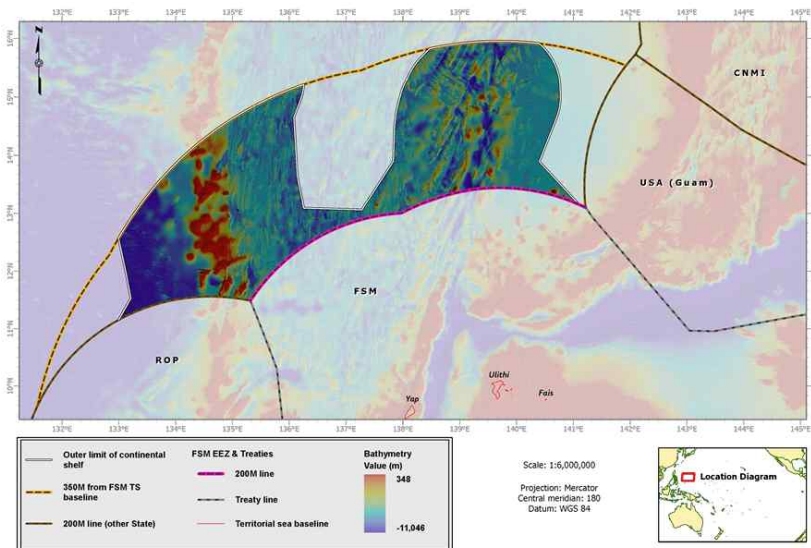


그림 출처: Executive Summary  
Partial Submission by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oncerning  
the Area North of Yap 2021

#### 미크로네시아 200해리 이원 대륙붕 권원 주장

미크로네시아는 현재까지 총 4차례 유엔해양법협약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관한 정보를 제출한 바 있다. 첫 번째는 2009년 5월 CLCS에 제출한 문서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와 함께 온통자바 해저고원(Ontong Java Plateau)에 대해 권원을 주장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미크로네시아가 CLCS에 단독으로 제출한 정보로 에아

## 태평양도서국 미크로네시아

우리피크 해저고원(Eauripik Rise)에 있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해 자국의 권원을 주장한 것으로 2013년 8월에 제출되었다. 세 번째는 미크로네시아가 얍(Yap)섬 북부지역의 일부 대륙붕에 대해 권원을 주장한 것으로 2022년 4월에 제출했다. 금번 1월 네 번째로 유엔에 제출한 정보는 지금까지 미크로네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들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해양경계 및 대륙붕의 영속성에 관한 내부 규정에 근거한 최신의 해도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해도정보를 유엔에 제출한 것이며, 더불어 얍섬 북부 지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관한 새로운 권원 주장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미크로네시아는 유엔에 제출한 첫 번째 정보를 제외하고 그 결과에 관한 권고를 CLCS로부터 받지 못했다. 유엔은 정보문서가 제출되면 유엔 해양법국(UN DOALOS) 관행에 따라 90일간 유엔 해양법국 웹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이후 CLCS의 검토를 위해 CLCS 사무국으로 정보를 넘긴다.

그림 15. 새로운 해도를 검토하는 미크로네시아 시미나 대통령



그림 출처: Pacific Island Times

미크로네시아 시미나 대통령은 2024년 유엔 정보 제출을 위해 2023년 12월 미크로네시아의 해역을 새롭게 작성한 해도를 승인했다. 이들 해도는 온통자바 해저고원, 에아우리피크 해저고원, 무사우 해저산맥(Mussau Ridge) 및 얍섬 북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해도는 최근 해양경계 및 대륙붕의 영속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부 개정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도 역사적으로 처음 시도된 것이다. 미크로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시도가 태평양 도서국들이 2021년 태평양도



## 태평양도서국

## 미크로네시아

서국포럼(PIF)에서 선언한 해양경계의 법적 영속성과 관련하여 국내적 국가관행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언급하고,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들에게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현재 미크로네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전체 넓이는 72,500 제곱마일(sq. mi.)(약 187,774km<sup>2</sup>)에 달하면, 이 중 2024년에 새롭게 주장한 대륙붕 권원의 넓이는 약 190km<sup>2</sup>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 중 압섬 북부 지역의 경우 팔라우와 일본의 대륙붕 권원 주장과 중첩하고 있다. 시미나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위해 2022년 12월 법무부 권고에 따라 카핑가마란기 환초(Kapingamarangi Atoll)에 첫 번째 해역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했다. 이 시설은 인근 해역의 해수면 상승 등을 관찰하고 해양경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카핑가마란기 환초는 미크로네시아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통해 미크로네시아가 자국 해역에서 감시활동 지원, 법집행, 급유 등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크로네시아는 이러한 시설을 자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계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자국의 해역 관할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적 시사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태평양 도서국에게 국가의 존속과 관련하여 타국에 비해 더욱 직접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태평양 도서국들은 PIF 등을 통해 육지의 해안선이 후퇴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의 영역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를 주변국가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 5. 개최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PIF의 선언을 지지한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PIF 선언 지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태평양 도서국 지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 어획량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어장이며, 우리나라가 UN 등 국제무대 진출시 우리의 정책을 지지해 주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PIF 선언 지지가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정치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는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과 외교의 가교 또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태평양도서국 미크로네시아

출처 : [1] Embassy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2022년 4월 25일, “FSM Secures Additional Continental Shelf Claim in the North of Yap Area with the UN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2] Pacific Island Times, 2024년 1월 15일, “FSM renews claim over mineral-rich territories in the high seas” [3] Pacific Island Times, 2024년 2월 12일, “FSM formalizes territorial claims” [4] RNZ, 2024년 1월 17일, “Pacific: Pacific News in brief for January 17” [5] UN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2023년 10월 31일, “Submissions,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pursuant to article 76, paragraph 8,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6] 외교부, 2024년 2월 28일, “서남아시아태평양 국가/지역 정보”





## 태평양도서국

## 태평양도서국

전문연구원 민영훈

## 태평양도서국의 지정학: 2024년 전망

2024년 1월 31일 호주 싱크탱크 기관이 로위연구소는 태평양도서국의 지정학(Geopolitics in the Pacific Islands: Playing for advantage)이라는 제목으로 웹버전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로위연구소는 향후 태평양도서국들이 세계 전략경쟁을 통해 자국의 발전을 최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호주, 미국 등 태평양도서국 전통 공여자는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회적 포용 및 다자간 이니셔티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로위연구소는 태평양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에서 전통 공여자와 협력하는 것은 장기적인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림 16. 태평양도서국과 전통 공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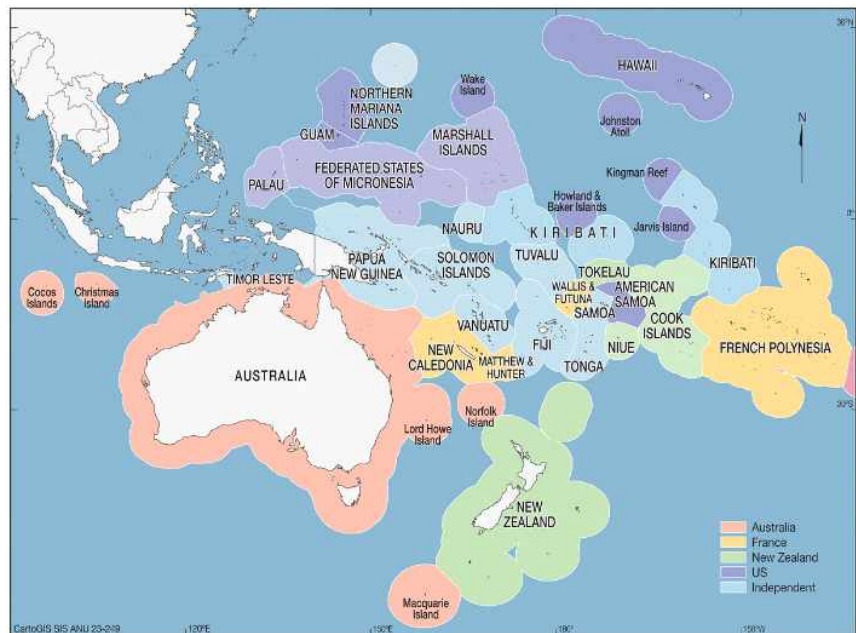


그림 출처: Lowy Institute

## 전통 공여국과 비전통 공여국의 경쟁

호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통 공여자는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지정학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태평양도서국들은 이러한 경쟁이 군사화등과 연계한 전략적 조작





## 태평양도서국

### 태평양도서국

(strategic manipulation)과 연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전략 경쟁에 있어 진영 선택을 거부하고 적은 없으며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음(friends to all, enemies to none)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태평양도서국들이 전략 경쟁의 환경을 활용하여 원조를 극대화하고, 정치적, 국가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친구가 된다는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모두 관련 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와 거버넌스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태평양도서국들은 미국 및 프랑스와 제한적인 안보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파푸아뉴기니 등과 같은 국가들은 안보에 있어 전통 공여국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림 17. 태평양도서국 공적개발원조 재정 소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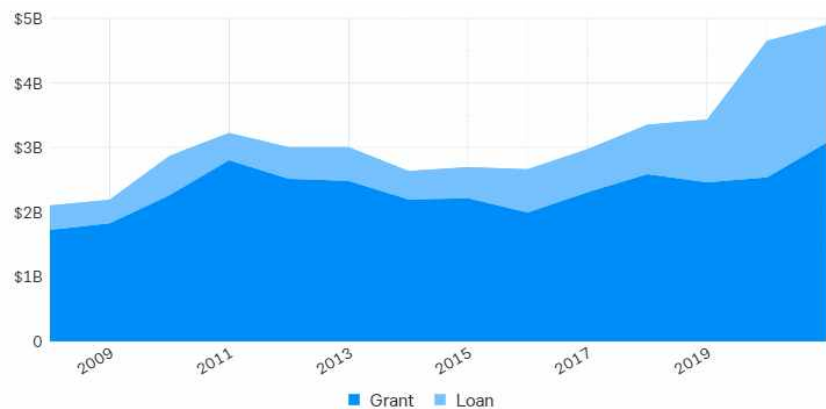


그림 출처: Lowy Institute

### 중국과 전통 공여국의 재정 지원 차이

호주와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과 거의 협력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이 일부 태평양도서국들에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이는 중국 기구들의 이들 지역에 확장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들 기구들의 확장을 억제하고 원조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여 호주와 미국은 전통 공여국으로 그 영향력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공여국들간 협력하도록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지역의 우선순위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태평양도서국 공여자들이 원조에 있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태평양도서국들 또한 경쟁에서 오는 경제적 이점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더불어 일부 태평양도서국에서는 조직적 부패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압도하기도 한다.

## 태평양도서국

## 태평양도서국

결과적으로 전통 협력국들은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고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태평양도서국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독립적일 수 있으나, 지역 또는 다자적 동맹이 보다 큰 규모의 사업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고 태평양도서국들의 목표에 대응한 협력과 주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동맹을 중점으로 전략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협력 대응은 원조의 질과 투명성, 책임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개발 규범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지역 협력 대응은 공동 목표를 필요로 하고 행정시스템의 통합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18. 태평양도서국 중국 원조 규모



그림 출처: Lowy Institute

현재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대부분의 원조는 양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영향력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지역 협력 대응은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 효과성을 견고히 하기 위한 필수 조직을 개편하고, 공동 가치에 근거한 지역 프레임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동맹국 사이에 힘의 상황 (situations of strength)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다자간 협력을 통해 전통 공여국들이 더 높은 원조 기준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 다른 비전통 공여국들이 가지고 있는 신속성과 재정 활용의 용이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전통 공여국들은 다자간 협력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프로그램을 태평양도서국들의 우선순위와 주요 목표에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 공여국들이 제공하는 원조는 지속가능해야 하며, 주요 공동 가치를 통해 원조의 책임성과 태평양 지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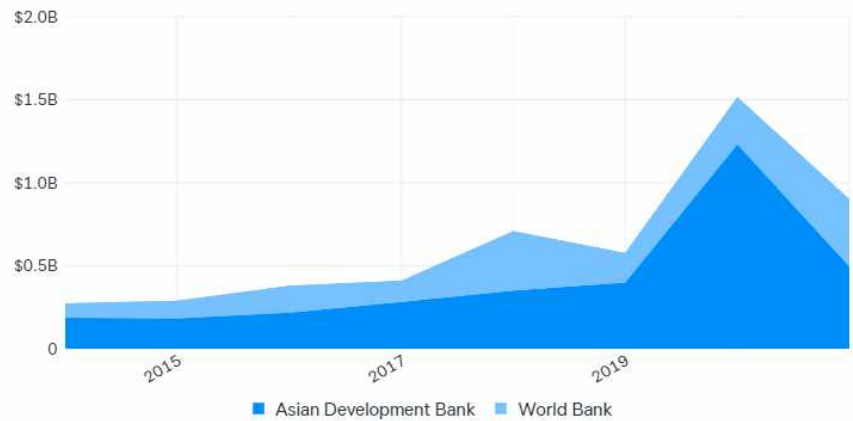


## 태평양도서국

### 태평양도서국

그림 출처: Lowy Institute

그림 19. 태평양도서국 다자적 개발 재정 규모



###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2023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양자간 원조규모를 2배로 증액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양자간 원조 방식은 현재 로위연구소에서 분석한 전통 공여국들간 원조 협력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전통 공여국간 협력 체계가 다소 미비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와 전통 공여국의 원조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전통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이를 통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1] Lowy Institute (Meg Keen and Alan Tidwell), 2024년 1월 31일, "Geopolitics in the Pacific Islands: Playing for advantage"



## 3개월 내 행사계획

### The 29<sup>th</sup>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3월 4일(월) ~ 29일(금) / 자메이카 킹스톤

- 주최 국제해저기구(ISA)
- 주요 내용 법률기술위원회 (3월 4일 ~ 15일)  
이사회 (3월 18일 ~ 29일)

### 2024년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 3월 13일~5.22 / 연세대학교 강의실

- 주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교육연구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주요 내용 국제해양법과 현안 문제 강의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일(금) ~ 2월 16일(금)
- 참여 대상 국제해양법에 관심 있는 모든 대학(원)생

### 제4차 플라스틱 협정 성안을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

■ 4월 19일(금) / 캐나다 오타와

- 주최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 주요 내용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개발을 위한 논의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규제에 관한 논의